

문재인정부 출범 1년,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

패널토론

고려대 신관호 교수
2018년 5월 10일

세가지 논평

- 경제성장
-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
- 외국자본 및 법인세

경제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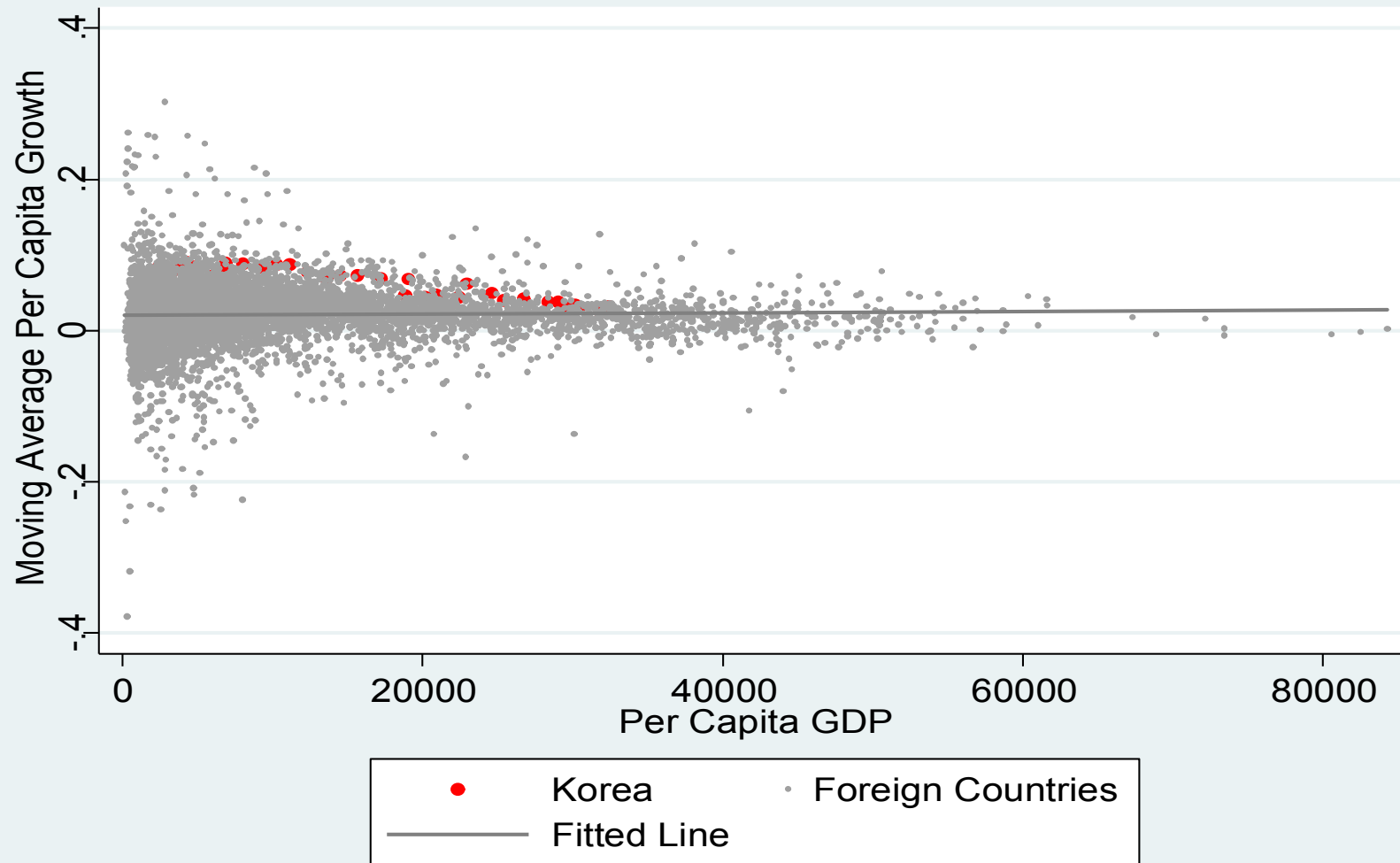
■ 이제민 교수 발제

- 핵심은 국가혁신체제 정비와 기업 생태계를 규정하는 산업조직 개혁
- 연구개발이 최종개발 중심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의 문제
- 현재 재벌은 과거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범용능력(generic capability)과 내부시장(internal market) 활용 효과 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커
- 소득주도 성장은 내수 확대,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, 공정거래 확립, 복지 확대하면 저절로 될 것.

경제성장

- 두 가지 오해
 - 성장둔화는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?
 - 주류경제학적 정책처방은 계속 실패?
- 성장둔화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
- 주류경제학적 정책처방은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음

일인당 성장률과 일인당 GDP



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들 (\$10,000, \$15,000, \$20,000, \$25,000, \$30,000)

country	near 10000	near 15000	near 20000	near 25000	near 30000	제외사유
Azerbaijan	O					산유국
Equatorial Guinea	O	O	O	O	O	인구, 산유국
Lithuania		O				
Taiwan		O	O	O	O	
Estonia		O				
Aruba		O	O	O	O	인구, 산유국
Turkmenistan		O				산유국
Iceland			O			인구
Maldives			O			인구
Singapore			O			
China, Hong Kong SAR			O			
Panama			O			
Anguilla				O		인구
Ireland				O	O	
Finland					O	
Luxembourg					O	인구

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기술진보에 의해 가능

- 경제문헌에 따를 때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은 다음과 같음(예를 들어 World Bank (2007))
 - 교육
 - 인프라투자
 - R&D 투자
 - 개방
 - 금융발전
 -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유도
 - 제도

규제개혁을 통한 기술진보율 제고

- 규제개혁 왜 어려운가?

- 이익집단 문제 => 규제개혁을 통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지원 하에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
- 사회적 약자 문제 => 규제개혁을 통해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
- 정부에 대한 지나친 기대=>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
-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 => 과학기술발전, 시장경제발전에 따라 사전규제의 실효성은 점점 낮아짐. 민간이 자기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. 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 불비. 예를 들어 집단소송제 강화 필요.

Inclusive Growth vs. 소득주도성장

- 김현욱 박사: 소득주도성장은 “광의의 포용적 성장정책”?
- Inclusive growth (World Bank):
 - “The microeconomics dimension captures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for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competition, including creative destruction of jobs and firms.”
 - “The inclusive growth approach takes a longer term perspective as the focus is on productive employment rather than on direct income redistribution, as a means of increasing incomes for excluded groups.”

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

- 현정부의 정책조합
 - 급격한 최저임금인상+부작용을 재정으로 보전
- 이러한 조합이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보다 낫다는 경제적 근거는 찾기 어려움
-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의 근거는?
 - 우리경제 실정에 맞는 적절한 최저임금 수치를
경제적근거를 토대로 찾아내는 작업이 우선되었어야 함
-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실업보험의 소득대체율을
높이고 급여기간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
확충하는 것이 보다 급선무
 - 사회안전망 확충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할 수 있는
근거로 작용

외국자본 및 법인세

■ 이제민 교수

- 외자는 우량 재벌기업 주를 집중 매입, 그 후 그들 기업이 이윤율을 올리는 과정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추동력으로 작용
- “주주가치” 상승이 국민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
- 법인세 인상과 주가차익 과세 강화 필요

외국자본 및 법인세

-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동은 경제위기의 주요 요인 중 하나
-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는 매우 안정적이라 외환위기와 관련 없음
-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술진보의 주요 경로
- 법인세의 지나친 상승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, 창업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을 줄이며, 극단적인 경우 국내기업의 외국 이전을 초래